연합노보

www.newsunion.co.kr

특보 2017.10.31 (화)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03143)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 전화398-3620~2 / 팩스398-3630 / 발행인 이주영·편집인 임화섭.김지연.김남권

5년만에 드러난 공영방송 경영진의 '연합뉴스 파업깨기'

2012년 파업 때 KBS·MBC·YTN, 전재료 삭감 요구

"삭감요청, 연합 사측 도와주는 길" KBS 사장 발언 공개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회사는 외부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KBS는 지난 28일 공문에서 노조의 파업 이후 현저하게 줄어든 기사량을 표로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통상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전재권 계약해지 등 조치가 불가피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상파 3사 보도운영간부들의 최근 회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방송사도 조만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올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성기준 전무·비상대책위원장, '파업사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5년 전 연합뉴스 사상 첫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만인 2012년 3월 30일, 박정찬 당시 사장과 함께 경영진에 재선임된 성기준 당시 전무가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내용이다.

첨부된 KBS의 공문에는 연합뉴스 파업 이후 기사량이 줄었으니 전재료를 대폭 삭감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으름장이 적혀 있다.

성 전무는 이 공문이 지상파 3사 보도운영 간부의 최근 회동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며 다른 방송사들도 유사한 공문을 보내올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용윤 당시 정보사업국장이 약 보름 뒤인 4월 13일 사내게시판에 지상파 3사와 YTN 등이 전재료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후속 공지했다.

국가기간통신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고객사의 열망의 표현이었을까? 최근 보도된 바를 따르면 그렇지 않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해 이달 17일 보도한 김인규 전 KBS 사장의 당시 임원회의록을 보면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김 전 사장은 3월 25일 파업 대책 회의에서 "(연합뉴스) 서비스가 안 된 만큼 전재료 삭감 요청해야 한다. 그게 (연합뉴스) 사측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전재료 삭감이 뉴스 제작 차질 때문이 아니라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정보도 회복과 인사전횡 철폐를 내걸고 파업에 나선 연합뉴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지시였던 셈이다.

성 전무의 말대로 당시 방송사들이 회동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면 김인규 체제의 KBS와 김재철 체제의 MBC, 배석규 체제의 YTN이 연합뉴스 파업을 깨려고 작당·모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 전 사장의 임원회의 발언이 3월 25일이고 KBS가 공문을 보낸 것이 불과 사흘 뒤인 28일이다. 그 사이에 방송사 보도운영 간부들의 회동이 있었다면 방송사들은 연합뉴스 노조를 압박하려고 무척이나 기민하게 움직였던 셈이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회사도 아닌 연합뉴스의 파업을 그토록 저지하고 싶어했을까.

연합뉴스 파업을 깨기 위한 전재료 삭감 요구가 과연 김 전 사장 개인의 아이디어였는지, 아니면 당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직 알 길이 없다.

한편, 공정보도 훼손으로 2012년 파업을 촉발한 박정찬 경영진 내에서 편집국장과 국제·업무상무를 지낸 박노황 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월 쓴 대사원 호소문에서 "장기 파업으로 기사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빌미가 되어 조중동과 전재계약 해지 사태를 맞았다"며 불공정보도 전횡을 외면한 채 파업 탓으로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언론 바로선다"

20일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국정감사)가 개최되기에 앞서 연합뉴스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불공정보도 인사전횡 박노황은 퇴진하라",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언론 바로선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이끌고 있는 이주영 지부장 뒤로 박노황 사장(왼쪽부터)과 이홍기 전무, 심수화 상무 등 경영진의 모습이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박 사장은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훼손, 인사 횡포 등 제기된 의혹과 비판을 대부분 전면 부인했으며 책임 지는 자세로 퇴진하라는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진투쟁 5개월' 연합뉴스지부, '파업 50일' KBS·MBC본부에 투쟁기금 전달

공영언론 정상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짓밟힌 회사를 되살리고자 파업을 벌이고 있다. 두 본부의 파업 53일째인 이달 26일, 연합뉴스지부는 동병상련의 정을 담아 두 본부에 조합원 1인 1만원의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마침 이날은 연합뉴스지부가 조합원들의 뜻(5월 25~26일 조합원 설문에 68.1% 참여해 75.7% 퇴진 요구)을 모아 경영진 퇴진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5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안광한 MBC 사장, 배석규 전 YTN 사장과 함께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언론 부역자 1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거부합니다" 성주에 현수막 붙었던 까닭은

"사드 반대시위에 '외부세력 개입' 보도 압박 심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격렬한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던 2016년 7월 15일 경부 성주에서 사드 배치 설명회가 열렸다. 이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버스가 발이 묶이고 총리에게 계란과 생수병이 쏟아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많은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외부인 개입이 폭력사태의 한 원인이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주민들로 구성된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월 17일 한 발언과 이후 외부인사 개입과 관련한 수사 속보 등으로 이를 다뤘다.

물론 이들 기사는 관계자 발언과 경찰 수사 등을 바탕으로 쓰인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사드 성주 배치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성주 거리에는 "성주군민은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의 취재를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실제로 현장에서 연합뉴스 기자들은 주민들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현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 여러 부서의 기자들이 사드 배치 논란을 둘러싸고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논란이 된 기사들이 없는 사실을 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을까.

회사의 편집 라인이 '외부세력 개입' 문제에 상당히 천착했다는 점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7월 16일 '편집회의 결과'라는 전국 동보가 지역취재본부에 전달됐다. 보수 언론 중심으로 사드 반대 시위에 '전문 시위꾼'이 붙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 (경북) 사드배치 성주 주민 동향 체크 및 황 총리 '6시간 감금' 수사 속보(외부 세력 개입 여부, 폭력(기물파손) 행사 주민 사법 처리 여부 등) 처리 요망 ※ 황 총리에 대한 감금 논란을 다룬 박스 기사 송고 요망.

수사 속보로 '외부 세력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는 지시가 공개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측은 며칠 뒤인 7월 21일 열린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도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취재했음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2016년 7월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오간 지적과 사측의 답변이다.

▲ 사드 배치결정과 관련해선 연합뉴스가 이 문제를 다각도로 심층 접근해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되지 않도록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가 성주에서 봉변을 당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행태를 분석하고 괴담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폭력시위 주도자를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시위문화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강도가 좀 약하지 않나 싶다. 괴담과 유언비어의 실체를 해부하고 외부인의 개입 실상을 밝히는 등 취재를 더 해야 한다.

☞ 황교안 총리 봉변 사태와 관련해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취재했고, 대책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외부 세력이 실제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어 해당 인물이 누구이고 폭력사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알아내려고 경찰과 시위 참가자 등을 상대로 정밀 취재를 했습니다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괴담과 유언비어 실체는 충분히 해부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전국 취재망을 신속하게 총가동해서 사건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수용자권익위원의 칭찬과 독려대로 '외부인의 불순한 개입 행태'를 분석한 연합뉴스 기사들은 정말 공정하게 쓰였던 것이었을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사회적 논란마다 등장했던 '외부세력과 괴담에 선동당한 주민들'이란 프레임이 이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때 여러 기사가 기자 개인이 아닌 '특별취재팀' 이름으로 송고됐다. 당시 일선에 투입된 여러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당시 폭력사태가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었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가려내 처벌하면 될 일이지 어떤 단체가 조직적으로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집회에는 성주 주민이 대부분이었고 진보성향을 띤 사회단체 사람들도 참석했으나 사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에 누가 외부인이고 누가 외부인이 아닌지 가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렇게 보고했지만, 여전히 외부세력 개입을 문제 삼는 기사를 쓰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이에 항의하자 "연합뉴스 조직원이 아니냐"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그런 기사는 기자명이 아닌 '특별취재팀'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당시 전국부장은 최근 노조의 질의에 그때 실제로 나온 발언 등 중요한 팩트가 있어 다루도록 했을 뿐, 특정한 방향을 취재본부에 지시하거나 압박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주민들로부터 박대에 가까운 취재거부를 당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렸고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우호적인 현장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는 일선 기자들의 기억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끌어내! 끌어내!" 박노황 사장, 퇴진 요구 노조위원장에 손가락질·고성

10월 24일 박노황 사장이 사장실 문앞에서 이주영 지부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치고 있다.

이 지부장은 박 사장에게 편집권 독립 파괴, 공정보도 훼손, 인사 전횡 등 각종 부당 경영행위의 책임을 지고 조속하게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그를 향해 박 사장은 사장실에 들어오지 말라며 고함을 지른 데 이어 옆에 있던 사측 관계자들을 향해 "끌어내!"라고 여러 번 소리 질렀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2015년 3월 박 사장이 첫 출근날 편집권독립 사수를 외치며 피케팅을 하는 노조 집행부를 향해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지 뭐하고 있어!"라고 버럭 고성을 냈던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거나 "결기가 대단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